

염한웅 부의장 “바이러스기초연구 필요...감염병 R&D 책임부처 뒤야”

발행일 : 2020.12.29



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9일 “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은 일종의 교육책”이라고 설명했다.

염 부의장은 이날 과학기술분야 기자와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“감염병 R&D 기관이 복수로 설립된 것을 공무원 밥그릇 싸움의 결과로 보는 시선도 있다”면서 “관련 회의를 갖고 자문을 한 경험, 즉 안에서는 보는 관점에서 말하면 당장 감염병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였다”고 밝혔다.

보건복지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국립감염병연구소·바이러스기초연구소 신설 계획을 밝히고 예산에 반영했다. 감염병연구소가 백신, 치료제 개발 등 응용연구를 전담하고 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기초연구에 집중한다는 명분을 내놨지만 중복 투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.

염 부의장은 “부처간 다툼의 의한 결정이었다면 당연히 비판했을 것”이라면서 “국내 감염병 R&D 역량을 감안한 불가피 한 선택였다”고 말했다.

그는 “감염병연구소는 R&D 예산을 관리하는 연구관리 기관으로 확대,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”면서 “세계

적 연구자를 초빙해 우리에게 부족한 감염병 R&D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별도 연구소가 필요했다”고 설명했다.

이어 “감염병 R&D의 핵심인 백신만 놓고 봐도 아직 mRNA 기반 백신의 기초 연구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”면서 “바이러스기초연구를 통해 감염병 R&D 역량이 어느정도 쌓이면 감염병 연구 기관 통합 논의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”이라고 부연했다.

염 부의장은 R&D 책임부처·기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.

염 부의장은 “출연연, 대학은 물론 부처가 하나의 미션을 갖고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”면서 “감염병 R&D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책임부처, 감염병연구소가 책임기관을 맡고 예산 코디네이트 권한까지 갖는 방안을 제안했다”고 설명했다.

그는 “과기자문회의에 관련 특위를 두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독하는 방안까지 포함된다”면서 “정책에 어느정도까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R&D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역설했다.

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 안건인 '공공 R&D 확대'와 관련해선 “미세먼지, 감염병, 기후변화, 폐기물 등 공공 관련 R&D 투자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따라왔다”면서 “공공 R&D 개념을 세우고 2025년까지 관련 예산의 현재의 3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보고했다”고 설명했다.

최호기자 snoop@etnews.com